



원전 1기당 현장 규제인력 1명도 안돼

해외 주요국 평균 비교, 국내 인력 현저히 부족
국내 안전규제 인력 수급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에 따르면,
-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1기당 약 23명 수준이며 주요 4개국 평균(약 36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표1. 주요국 원전시설 대비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 참조

<표1. 주요국 원전시설 대비 원전 안전 규제 인력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기관구분	기관명	인원	가동 원전수	원전 호기당 인원	
					정부기관	기술지원기관 포함
대한민국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93	23기	4.0	22.9
	기술지원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34			
미국	정부	원자력 규제위원회	3,961	104기	38.1	
프랑스	정부	원자력안전청	443	58기	7.6	38.4
	기술지원기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	1,786			
일본	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107	50기	11.6	23.6
		원자력 안전보안원	370			
		문부과학성	104			
	기술지원기관	원자력 안전기반기구	401			
		원자력안전 기술지원센터	200			
캐나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850	18기	47.2	
주요 4개국 원전 호기당 원전 전문 규제 인력					35.7	

○ 원전 소재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 대전, 총 5개)에 상주하는 현장 규제 인력은 19명으로 가동중인 원전 1기당 0.8명 수준임.

- 현장인력 규모가 작아 발전소별이 아닌 지역별로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별로 3~4명의 적은 인력이 근무함에 따라 휴가나 교육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업무대행자가 없어 복무에 애로가 있을 정도임.

* <표2. 발전소별 현장 파견인력 현황> 참조

<표2. 발전소별 현장 파견인력 현황>

지역	가동원전	호기	규제인력	인원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신1호기, 신2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 신1호기	4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방폐장주재관	2명
			계	6명
울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영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6기	원전주재관	3명
			현장방재관	1명
			계	4명
대전	하나로(연구용)	1기	현장방재관	1명
			계	1명
합계		23기	19명	

* 가동원전은 계획예방정비로 인한 정지된 원전까지 포함

*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기준

□ 민병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이 규제기관에 의한 적발이 아닌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결국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안전 규제 기능을 다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 또한, “기술과 설비로 안전성을 극대화해도 결국 최전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인력” 이라고 강조함.